

“앵커기업 잡아라” 통합특별시 투자 유치 행정력 집중

전남도,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4차 회의
산업별 현장중심 맞춤형 전략 등 논의
김지사 “관심→투자 연결 실행력 중요”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70일 앞두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4차 회의를 열어 앵커기업 중심 투자유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투자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5일 첫 회의 이후 지속 추진 중인 기업 유치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기업유치 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고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향을 점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 투자유치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략산업 국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8명이 참석해 핵심 기업별 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기업 접촉과 유치 활동 성과를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40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공유하고, 산업 생태계에 파급 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투자 제안 전략과 단계별 후속 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박람회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다. 지금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온 시·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행사장 재검토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출범 이후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국장 중심의 기업 방문,

현장 상담, 맞춤형 제안 활동을 확대하는 등 현장 밀착형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투자 협약과 생산시설 증설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제 기업의 관심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까지 70일을 앞둔 지금이 투자 유치의 성과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전남이 가진 산업 입지, 재생에너지, 전력·용수 등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기업유치 특별전담반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앵커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에너지·첨단제조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김영록-민형배, 섬박람회 주행사장 놓고 대립각

김 “깃털처럼 가벼운 재검토 주장” 지적
민 “간척지 시설 조성 적절한 검토 필요”

개막을 4개월여 앞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을 놓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깃털처럼 가벼운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재검토 주장은 아니면 말고 인가요”라며 민형배 의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개막을 녀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행사장 재검토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주행사장 변경에 따른 혼선과 막대한 매물 비용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여수세계섬박람회, 안전해야 성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12 여수엑스포를 통해 검증된 기존 엑스포 전시관이라는 압도적인 인프라를 두고 굳이 배수 우려가 있는 간척지에 임시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22일 이틀간 여수세계섬박람회장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섬박람회 주행사장은 2020년 박람회 신청 당시 여수시가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돌산 진모지구는 섬이라는 상징성, 여수시 소유 부지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반면 여수엑스포장은 2025년 시설과 부지 매각 임대 등 정부 선투자금 3천658억원 상당 의무, 시설의 약 70%가 임대 중

이어서 2026년에는 사용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침수 위험도로도 부지 기반시설과 함께 배수시설이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박람회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다. 지금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온 시·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행사장 재검토 요구에 선을 그었다.

/양시원기자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성료...탄소중립 산업·기술 교류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KEET)’이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하며 22일 사흘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남도·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G

X) 국제주간’과 연계해 국내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 환경 신기술,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총 131개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양시원기자

민형배 “전남광주를 탄소중립특별시로”

개별 목표 2045년으로 통합 방안 제시
생활형 탄소중립 정책...삶의 변화 증명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탄소중립 특별시로 만들겠다”면서 현재 각각 2045년과 2050년으로 나뉘어 있는 전남과 광주의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민 의원은 “광주는 2045년, 전남은 2050년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으로 도약하는 과정인 만큼, 광주의 2045 목표를 전남광주 전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제시해온 RE100 산업단지 와 에너지 전환, 광역 BRT 중심 교통체계, 물순환 도시 구축 등을 탄소중립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산업과 인프라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제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시민의 생활 속 변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형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했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후안전도시 조성, 도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권 공원과 녹지 확대, 학교와 경로당 등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확대,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남광주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탄소중립은 산업단지나 교통망에 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사는 집과 걷는 길,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동네 공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더 시원한 거리와 더 가까운 공원, 줄어든 냉난방비와 지역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수익을 통해 시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하겠다”며 “전남광주를 산업과 교통이 앞서는 도시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시민체감형 탄소중립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보호하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